


크리스찬아카데미-NCCK 공동기획 연속토론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시즌02
7차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4월 12일(월) 오후 6시

 줌 회의

링크: <https://url.kr/y27fwx>

ID: 238 242 5962

암호: ncck1008

 유튜브 생중계 

공동주최
크리스찬아카데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공동주관
크리스찬아카데미
NCCK신학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에 초청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재난 상황은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살아온 인간의 삶 전체와 그 삶이 이루어 낸 인간문명 그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왔던 온갖 자화자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묻게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의 과오와 책임은 더욱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 보다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교회로서 사는 새 길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새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과 과제들을 가지고 연속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향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9. 1

크리스찬아카데미 채수일 이사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 무

시즌 1)

- 1차 9월 14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 2차 10월 12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 이후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 3차 11월 9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한국사회 현상학”
- 4차 12월 14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특별 프로그램) 1월 11일(월) 오후 6시 /

기사연 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토론회

시즌 2)

- 5차 2월 8일(월) 오후 6시 /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
- 6차 3월 8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생태적 순환경제로의 전환”
- 7차 4월 12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 8차 5월 10일(월) 오후 6시 / “마무리 대토론”

크리스찬아카데미 - NCKK 공동기획 연속토론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시즌2) 7차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목 차

인사말 3

발제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5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욕구충족의 경제를 넘어 필요충족의 경제로 15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경제를 넘어선 신학적 상상력**
최형묵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 기독교윤리학)

논찬 **논찬 1** 26
허석헌 (한국민중신학회)

논찬 2 31
강신환 (이화여대)

향후 일정 35

발제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¹⁾

이 승 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들어가며

새벽노동에 대한 연구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실 새 없이 낮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밤에는 새벽배달노동을 해온 30대 청년을 지난주에 인터뷰하게 되었다. 그는 낮에 하고 있는 일의 소득이 낮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밤에 조금씩 새벽배달 일을 시작해보게 되었는데, 점점 새벽배달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경험하는 일상이 장기화되었다. 그는 “다른 돈벌이 방법이 없으니 그렇지 가능만하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지요”, “새벽에 기껏 나가도 배달물량을 많이 주지 않으면 그날은 얼마 벌지도 못하고 오기도... 어떤 날은 새벽 1시까지 가도 물량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다시 집으로 오는 수밖에 없지요”라고 했다. 날마다 피곤에 담겨있는 지금의 삶에 대해, “지금 버는 돈을 다른 일을 혹시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나요?”라고 내가 물었다. 그는 “그런거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예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라 한다.

인터뷰를 마친 바로 다음날 연구실로 작은 선물이 하나 도착했다. 따뜻한 갈색의 작은 다과도마였는데 뒤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 청년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선물을 보낸 이의 이름 석 자를 바라보며 누구인지 가만히 떠올리다가 마침내 그가 작년 10월에 1년 6개월 동안 새벽노동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고인이 된 27살의 청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해 사고 소식을 듣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나 뵈었던 유가족인 부모님께서 손수 만드신 선물이라는 것을 곧 어머니와 통화하며 알게 되었다. 어머니께서 “그 힘든, 지옥같은 새벽노동에 청년들이 자꾸만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라 물으신다.

1) 본 원고는 [크리스찬아카데미 - NCKK 공동기획 연속토론회]에서의 발제를 위해 준비한 원고로, [이승윤 외, (2020), “주요국 고용안전망의 현황과 시사점” 감사연구원], [이승윤 (2021), “안전의 상품화와 위험의 불평등” 황해문화] 등 필자의 학술연구 내용과 결과를 재구성하며 준비되었음을 밝힙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부터 동이 트는 새벽까지 일하고도 잡히는 것이 부족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썰 새 없이 던지며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를 생각나게 한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텅비어있는 공허함을 느꼈을 그의 새벽을 떠올려본다. 노동이 주는 허무함이 갈릴리 바닷가의 아름다움도 가리지 않았을까. 작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이신 배기현 주교는 다음과 같은 글로 고단한 새벽노동을 기억했다.

“모두 두려워 문을 닫아걸고 있을 때에도 오염된 세상 한가운데서 온종일 목숨을 걸고 땀 흘리는 이 거룩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들 잠든 이른 새벽,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계단을 숨가쁘게 오르내리다 쓰러진 그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짊어졌던 짐은 쌀 포대였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기 목숨을 바친 성찬의 삶입니다. 힘겹게 몰아쉬었을 그 거친 숨결은 가혹한 고용 사회에서 과로에 시달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적 호흡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동력은 비인간적인 삶을 견디며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전례 없던 재난을 경험하며,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상 유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던 노동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요 속에서만 비로소 저음의 파동이 들리듯,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멈춤'을 경험하자 멈추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모두가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날마다 확진자수를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썰 새 없이 대면노동을 하고 숨가쁘게 뛰며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고단한 노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가지는 내재적 불안정성을 논하고, 이어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방식이 끊임없이 진화되어가는 다른 한편에서는 '액화되는' 노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타율성(시장소득에의 인간의 의존, 가격매김에 대한 인간의 길들여짐, 노동자에서 소비자로 전락한 시장의 종속성)에 저항하며, 주권과 자율성을 확보한 인간의 노력의 가장 근대적 개념인 복지국가의 속성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비참하게 드러난 지금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대안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해봐야 할지 제안해보겠다.

2. 노동의 불안정성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 누적 사망자 수가 2020년 말에 이르러 1천명을 넘어섰지만, 2019년에 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이미 2천 명을 넘어 한국은 줄곧 산재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하다가 추락하거나, 끼어 죽거나, 절단되거나, 직업병을 얻어 아프거나, 직장 괴롭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해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의 2배 이상이다. 그보다 많은 수가 일하다가 아프게 되고, 또 그들 가족의 가슴에 남은 아픔의 크기까지 상상

해본다면,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 수준의 작은 문제가 아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은 일터의 안전이 어느 한쪽에만 불평등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동자는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설 새 없이 대면노동을 지속해야 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일에서의 쉼도 선택할 수 없어 감염병과 과로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2020년 3월에 새벽배송을 하던 쿠팡의 노동자가 안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으며, 4월에는 경기도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급성뇌동맥파열로, 5월에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퇴근 후 잠을 자다가 숨졌으며, 6월에는 전남에서 택배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졌고, 8월에 숨진 택배노동자는 매주 70시간 이상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는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택배물류센터에서 밤샘노동만 하다가 건강해진 청년이 숨졌으며, 12월에는 34세 택배노동자가 6개월 동안 살이 20kg이나 빠지다가 숨졌다.

위험과 불안정노동의 교차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이제 그렇다면, 불안정노동의 근원적 이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계를 위해 고단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생존노동의 모습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드러난다. 현재의 복지제도들은 불안정노동자의 미시적·거시적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는데 있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후적 안전망인 산재보험도 주변부의 불안정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를 보였다. 또한 영세사업장이나 하청업체와 같은 한계기업들의 경우, 비용 감소에 대한 압박이 원천으로부터 지속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하청업체는 같은 물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압박에 놓여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늘어나면, 이로 인해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는 유휴노동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다. 즉, 노동자들이 불리한 조건의 일을 거부할 수 있는 협상력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이들의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더 열악해지거나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일터에서의 위험이 강화되지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협상력이 노동자에겐 부족하다.

위에서 설명한 현상은 자본의 자본축적 동기와 착취구조가 낳은 노동의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은 잉여가치를 축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는 노동력을 가치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한다. 개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질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에 의해 끊임없는 압력을 받게 된다. 잉여가치를 위해 자본은 노동의 과정에서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을 늘여 절대 잉여 가치를 얻거나, 노동 과정의 기계화 또는 효율화를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얻는다. 그리고 자본의 상대적 잉여가치 추구는 노동자를 쉽게 대체할 수 있게 만든다.²⁾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잉여 생산물을 그들에게 판매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핵심은 이것이다. 즉, 불안정성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정의적 특징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노동, 프롤레타리아트 노동 계급은 자본주의의 노동 조건을 언급 할 때 대체로 같은 개념이다. 노동의 불안정성이란 특히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2) Marx, K. (1996) Capital Volume I, London, Lawrence & Wishart Ltd.

서 노동자가 어느 계급에 속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의될 수 있으며, 지배계급의 끊임없는 자본축적의 추구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낳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상품화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다. 노동력은 원시적 축적 (primitive accumulation)을 통해 상품이 된다. 노동자는 모든 생산수단(가장 중요한 토지)에서 완전히 분리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자가 되며 노동력의 상품화는 착취의 토대가 된다.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축적을 위해 노동이 상품화되는 것을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는데, 기업과 자본이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노동자로부터 노동의 재생산에 필요한 많은 것을 분리시키고 기업들에서 사들이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토지, 물 등과 같은 천연자원에서부터 사회주택, 통신과 교통과 같은 공공성이 있어야 할 것들도 민영화된다거나, 정부의 규제 완화 및 부채 등을 통해 이주노동이나 비전형적으로 일하는 저임금의 노동자 집단이 있다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이나 다른 물적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적영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까지 민영화를 통해 빼앗긴 상황이 된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어 노동자들이 구매를 해야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라도 노동 시장에 더 의존하게 된다.

3. 액화노동의 시대

사전적으로 노동은 ‘사회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인간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된다(Bauman, 2005:226). Arendt(2019)³⁾는 인간의 활동 양식을 노동(labou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근대이전에 노동은 주로 고생, 고통, 수고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지만, 근대 이후의 노동은 임금노동 계약관계에 기반한 생산적 노동을 의미하며,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지위를 차지해왔다. 근대에 와서 노동은 인간 존재의 중요한 속성, 근대를 특징짓는 문화적 지표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달, 자동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과 함께 노동(labour)이라는 개념보다 일(work)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ILO와 OECD는 ‘노동(labour)’의 미래가 아닌 ‘일(work)’의 미래(The Future of Work)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이는 표준적 고용 관계를 특징으로 했던 임금노동의 모습에서 벗어난 다양한 일의 형태가 노동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노동(invisible work)으로서의 디지털 노동 즉, 노동이 수행되는 공간과 고용 관계를 구분해 내기 어려운 일의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고체화된 노동의 모습이었던 표준적 고용관계는 정규고용관계를 특징으로 했다. 정규고용관계란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고, 전일제이며, 종속고용이고 상당한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고용관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 고용관계는 이미 1970년대 이후 일터의 균열로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비표준적 고용관계가 지배적이 되어왔다(Weil, 2015).⁴⁾ 이어,

3) Arendt, H. 2019.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4) Weil, D.(2015).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송연수 역. 황소자리.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비표준적 고용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노동의 액화를 더욱 용이하게 해왔다(Weil, 2015). 그리고 생산활동을 일자리에서 일감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노동 자체를 쪼갤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고용 관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왔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에는 이러한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있다. 플랫폼 노동의 노동과정은 이전의 전통적 표준고용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고용관계의 모호성은 극대화되어 있으며, 다수 평가자들의 별점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노동통제는 더욱 정교해졌다. 쉼과 일의 경계는 사라져가고 있고,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은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작업장소와 사적공간 등의 경계가 완전히 형해화되었다.

비정규직의 증가, 하청노동의 증가, 프리랜서와 가짜자영업자의 증가에 더하여 플랫폼 노동의 모습은 이전의 전통적 표준고용관계에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고용관계의 모호성, 평가자의 다수화, 쉼과 일의 경계,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의 모호성, 작업장소와 사적공간 등의 경계가 무너지는 ‘액화노동(melting labour)’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액화노동에는 비표준적(non-standard)·비정형적(atypical) 노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성 자체가 형해화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까지를 포괄한다. 액화노동(melting labour)은 실질적으로는 계약관계에서의 경제적 종속과 인적종속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전통적 사회보장 시스템의 보호범주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액화노동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관련 법에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 관련법들은 임노동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액화노동은 이들 법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액화노동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에서의 소외, 협상력의 약화, 소득의 불안정성 심화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액화노동은 사회보장의 보호에서도 소외된다. 기존의 사회보험 등도 주로 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일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제도의 부정합성에 대한 분석은 액화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보호장치들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실질적 통제와 종속성이 액화노동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상법상의 계약관계로 인해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장된 고용관계, 다자간 고용관계로 인한 종속성과 통제가 지배적이다.

액화노동에 대한 노동과정의 실질적 통제와 종속성 심화는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생산, 물류, 유통, 의사결정은 노동시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생태계 변화는 노동과정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그 핵심적 특징은 노동의 탈공간화,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디지털 노동분업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진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는 유연화, 원자화된 노동에서 비롯된다. 플랫폼 노동의 일은 일감 단위(tasks)로 세분화되어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에게 경쟁시스템을 통해 배분된다. 결국 플랫폼 노동

자는 생산의 전체적인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미세업무(microtask)만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원자화는 하나의 일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 임금조차도 작은 단위로 쪼개져 다수에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 단편적이고 단속적으로 참여하여 일감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소득활동에서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며, 안전사고나 각종 비용(컴퓨터나 차량 구입비, 연료비, 보험료, 수리비 등)에 대한 부담은 본인이 떠맡게 된다.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와 협상력 부재는 플랫폼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비대칭성에서도 비롯된다.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이용자들(고객과 플랫폼 노동자)은 각각 제한된 정보에만 접속 가능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양쪽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탈공간화되고 원자화된 미세업무의 수행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집합행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 협상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액화노동의 탈노동자화는 기존의 노동관련법 및 사회적 보호시스템에서 배제로 이어지고, 노동과정에서의 원자화, 탈공간화, 디지털 노동분업의 심화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소외, 소득 불안정, 낮은 협상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4. 액화노동과 20세기 복지국가의 부정합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계화, 그리고 기술발전과 함께 자본축적전략이 미세조정되며 진화해나가는 과정은 노동자를 둘러싼 조건들을 변화시켜나갔다. 표준적이고용관계는 외주화와 하도급의 확대, 균열일터, 그리고 액화노동의 모습으로 노동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의 불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핵심역량을 제외한 일들을 ‘털어내는’ 방식의 분산, 지리적 이동, 노동시장, 노동과정 및 소비시장에서의 유연한 대응을 통한 유연한 축적의 방식은 대량생산시스템과 고정된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경직된 형태의 생산과정인 포디즘을 대체하기 시작했다.⁵⁾ 미시적 조정을 통한 자본축적방식의 변화는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이 핵심역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화시키는 과정에서 - 특히 세계화와 함께 확대된 이러한 외주화는 글로벌체인으로 그 생산과정의 범위가 지리적으로도 확대했다 -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하청업체를 두고 비용절감을 통한 자본축적을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핵심역량을 제외한 모든 역량들이 외주화되면서 하청기업들이 확대되었다. 유연성을 추구하는 원청기업은 규격화된 물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역량과 부품을 하청기업들에 외주화하고 유연성과 낮은 단가를 추구하는 원청기업들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하청기업들은 이들과 비대칭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결과적으로 낮은 단가에 대한 압력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종종 낮게 유지되고,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위협에 노출된다. 노동자는 안전을 위협을 받는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도급시간을 맞추려면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 하청업체의 고용주 또한 자본축적의 동기로 산

5)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Social Change, Oxford, Wiley-Blackwell.

업안전을 위해서 설비투자에는 소극적이다. 노동자도 안전교육보다는 한 시간을 더 일해 얻는 시장소득의 한계효용이 더 크다. 하도급 및 소량 생산으로 뒷받침되는 생산과정에서의 유연화는 인력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하청기업에서조차 핵심 근로자수는 최소화하고 불안정하게 유연화된 노동자 수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에 이르기까지 비전형적 모호한 고용관계를 활용하여 고용주는 인사관리 비용, 해고비용, 숙련투자, 사회보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기술발전과 자본축적 방식의 진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새벽배송의 빠른 확대를 또 다른 예로 들어볼 수 있다. 택배업의 성장과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힘입어 최근 ‘당일 배송’ 형태의 새벽배달노동이 등장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새벽배달노동은 배달 플랫폼인 ‘택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택배업은 2000년대 이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온라인 상품구매의 증가와 함께 성장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주문 후, 익일 배송 즉, ‘2일(D+1) 배송’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 육류, 해산물, 채소 등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익일 배송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벽배송’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벽배송’은 업체마다의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전날 밤 11시까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전과 낮시간 동안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위해 밤에 쉴 새 없이 고단한 노동을 해야 하는 새벽노동자는 표준적고용관계에 매우 많이 떨어진, 이용약관 동의의 형태로 일감을 하루하루 받고 모든 근로기준법과, 노조,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된, 액화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비정규직의 증가, 하청노동의 증가, 프리랜서와 가짜자영업자의 증가에 더하여 플랫폼 노동의 모습은 이전의 전통적 표준고용관계에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고용관계의 모호성, 평가자의 다수화, 쉼과 일의 경계,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의 모호성, 작업장소와 사적공간 등의 경계가 무너지는 액화노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의 액화(the melting of the labour)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응을 요구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 제도는 특정한 노동형태와 노동시장을 전제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액화노동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해결 방식은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는 (또는 포괄성을 높이는) 방식의 재분배나, 최저임금인상 등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중심 분배시스템의 미시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현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고용주가 사회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납부할 주체를 찾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아도, 대기시간 또는 다음 일감을 찾는 등의 비생산적인 시간 또한 상시적으로 생긴다. 이러한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의 경계는 실업의 의미에 모호성을 더하게 된다.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한 제도이므로, ‘실업’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노동시장 참여자가 표준적 고용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질병, 노령, 장애, 사망, 산업재해, 실업과 같은 예외적 상

황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다. 노동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과 노동시장 간의 부정합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현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고용주가 사회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납부할 주체를 찾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아도, 대기시간 또는 다음 일감을 찾는 등의 비생산적인 시간 또한 상시적으로 생긴다. 이러한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의 경계는 실업의 의미에 모호성을 더하게 된다.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한 제도이므로, '실업'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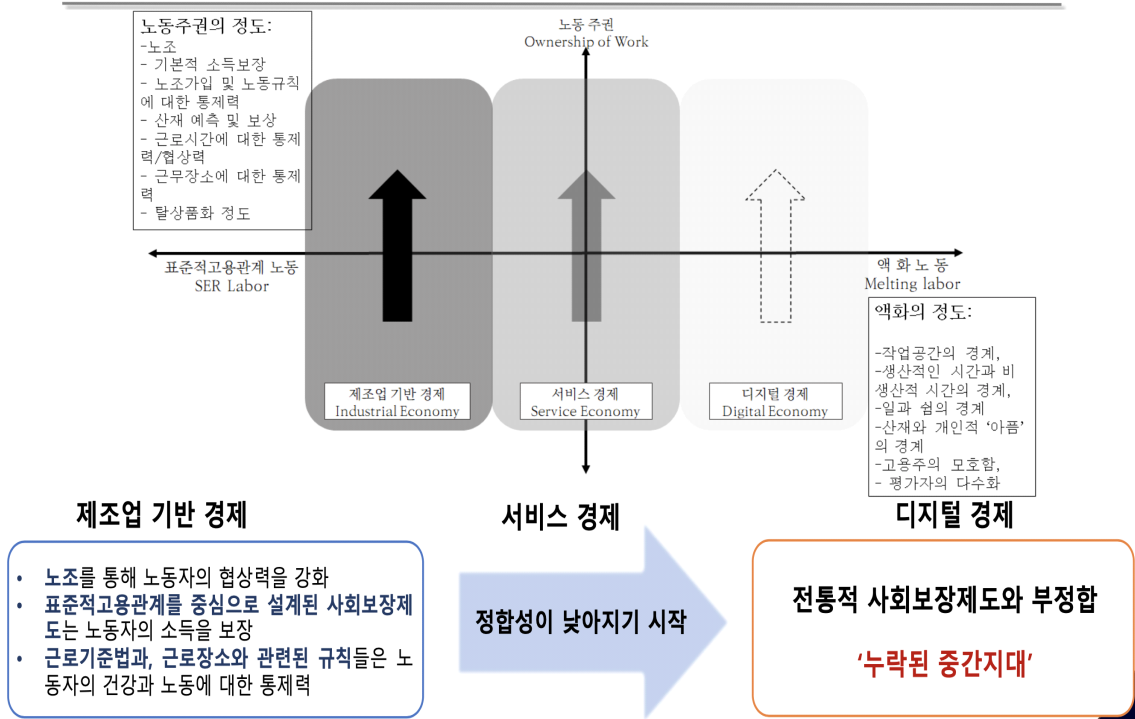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가짜 자영업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주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보험(취업 또는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자와 사업주 각각의 소득에 사회보험료를 부과)는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판단된다. 즉, 사회보험 자격취득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종의 소득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의 기본원리처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자격과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직업교육도 복지국가의 중요한 사회서비스이다. 디지털자본주의에서 숙련의 양극화가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숙련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와 연결된다. 앞으로 기술과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숙련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정부는 숙련형성과 교육에 더욱 개입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독립노동자들은 사적으로 재훈련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두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개인적 지출부담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숙련에 대한 개입이 소극적이며 궁극적으로 자산불평등 정도에 따라 개인의 숙련향상 가능성도 높아질 우려가 있어, 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다.

5.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 액화노동과 주권의 교차

복지국가의 실패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개인과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기반이 그 사회에서 정의롭게 분배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복지국가 수립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자본에의 종속적, 타율성으로부터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결성을 통한 협상력의 강화,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탈상품화, 노동의 재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탈상품화(사회서비스의 확대),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규정,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모두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일련의 제도들이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는 산업이 변화하고 일의 형태가 액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주권, 인간의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의 구성체인 것이다. 노동주권은 변화하는 노동의 형태에서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얼마만큼의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와 연관됨으로써,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핵심이 될 수 있다.

노동의 액화와 노동주권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방향은 액화노동의 시대에 누구나 노동주권, 자본에의 귀속과 타율성으로부터의 해방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원칙을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기본소득 또는 기초자산과 같은 공유부의 배당은 평등한 접근권의 보장을 구현시키려는 제도이다. 즉, 원래 모두의 몫이었던 공유부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공유지분 배당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 등에서의 불안정성을 일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정의를 풍요로운 삶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라고 할 때, 플랫폼 기업들은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한 공유부(common wealth)를 독점하는 사회정의를 위반한다. 이러한 플랫폼자본주의에서 사회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가시적 자유노동,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의 인정과 이에 의해 창출되는 모두의 몫인 공유부를 모두에게 나누어, 개인들의 시장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방향이다.

둘째,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안은 정치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실질적 자유의 실현은 사회정의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실질적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배당권의 보장을 통해 실현한다. 세 번째로는 ‘환경정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대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되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것은 인류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들에게(보편성) 자산이나 소득조사 등의 조건이 없는(무조건성) 공유부배당이 기본소득이다. 이러한 완전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성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과정 중의 보완적 대안으로 다양한 변형들이 제안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전제로 기본소득인 참여소득, 모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후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치기본소득,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는 생태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역화폐형기본소득, 시민권과 조세에 기반하여, 특정 인구집단의 개인을 대상으로, 정액의 급여를,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수당형 기본소득,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액의 현금을 한 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사회적지분급여, 자동안정적 경기조절장치 요소를 포함하여 경기상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안정화 기본소득이 있다.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래는 진화해나가는 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 노동자/개인들이 종속성에 대한 대항으로 개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권과 자율성을 끊임없이 보장하려는 노력의 제도조합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이 내제된 노동력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되면서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은 높아진다. 상품화된 노동으로 생존해야 하고,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도 상품화 되어 노동자의 물적기반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다시 노동자의 시장소득의존도는 높아진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상품화되어 팔린 노동력의 값인 임금과 소득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주택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들의 상품화된 정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노동의 탈상품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의 탈상품화, 즉 자본축적에 대한 저항을 추구하며 만들고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 폴라니는 상품화를 시장의 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변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상품화라는 것은 곧 시장 확장의 결과라고 한다⁶⁾. 여기서 그는 시장 확장은 노동, 토지 및 화폐와 같이 처음부터 판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상품으로 변환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본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이 상품으로 변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기에 이것들은 허구적 상품(fictitious commodity)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고, 인간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시장소득에 철저히 의존하여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다면, 이 종속성부터의 해방,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성과 자율성의 회복을 향한 노력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6)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칼 폴라니 (지은이), 홍기빈 (옮긴이)길(도서출판) 원제 :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년).

욕구충족의 경제를 넘어 필요충족의 경제로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경제를 넘어선 신학적 상상력

최 형 목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 기독교윤리학)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위기의 성격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오늘의 자본주의적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그것이 일회적 사태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형태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 또한 모두가 어렵지 않게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겪고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경제체제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된 지 오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여러 전염병 확산 사태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현상을 통하여, 또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통해 오늘의 자본주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예측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비로소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 실체를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미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세계 각국 정부들과 시민들은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닳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상한 조치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의 회귀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문명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였으며, 따라서 진정한 문명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과 단절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있다. 지난 6회에 이어 이번 7회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가장 직접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성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발제는 이미 제안된 경제·사회정책 제안에 공감하며, 그간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넘어 대안적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맥락에서 경제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의 의의를 되새기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발제의 문제의식은 지난 6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그리스도교와 신학의 역할에 대한 새삼스러운 환기로부터 자극 받았음을 밝힌다.

필요 충족의 경제와 욕구 충족의 경제

인간사회는 오랫동안 필요(needs)의 충족을 위한 경제생활을 영위해왔다. 그와 같은 경제생활이 영위되는 동안 필요의 충족을 넘어 무한한 욕구(wants)의 충족을 위해 부를 축적하거나 돈을 모으는 것은 악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경향은 모든 문명권에서 공통된 것이었다. 특히 성서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필요를 넘어선 부의 축적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사회 경제생활에서 욕구와 필요의 경계는 모호해졌으며, 끊임없는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경제성장이 오히려 권장되고 있다. 욕구의 충족을 위한 부의 축적은 더 이상 악덕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권장해야 할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의 전도는 자본주의의 형성과 더불어 이뤄졌다.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하면,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은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결합 속에서 이뤄졌다.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 윤리가 자본의 축적을 위한 투자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금욕주의 윤리가 무한한 욕구의 충족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고 마침내 필요의 한계를 무너뜨린 경제생활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금욕주의 윤리를 따른 끊임없는 생산적 활동이 ‘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초기 자본주의 형성의 정신적 기초를 형성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는 경제생활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윤리의 한 전환을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서 종교개혁은 교회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변화와 그리스도교의 경제관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자본주의 이전의 필요 충족의 경제와 그리스도교

성서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정의(zedakah)’의 관점에서 인간사회 안에서 이뤄져야 할 온전한 관계와 그에 따르는 경제생활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기서 물론 하느님의 ‘정의’는 신실한 인간의 실존을 형성하는 모든 것, 곧 평화, 해방, 속죄, 은총, 구원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의 차원에서 그것은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가르침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성서에서 신실한 하느님의 구원행위로서 정의는 억압받는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과 약속을 맺는 것을 중요한 거점으로 한다. 성서는 일관되게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한 하느님의 신실한 행위를 환기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를 강조한다. 출애굽 사건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계약법전(출애 20:22-23:33)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정신은 이후 신명기 법전(신명 12-26장)과 성결법전(레위 17-26장) 등에서도 재삼 확인되고 있고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또한 반복되고 있다. 그 정신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누가 6:20)라는 예수의 선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이러한 성서의 정의관은 오늘날 여러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시킨 근본 모티프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성서는 그와 같은 정의관을 밑바탕으로 하여 경제생활의 중요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부와 가난을 상관관계로 보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것을 정의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한 몫은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몫으로, 성서는 어떤 경우이든 그것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만나 이야기(출애 16:1-36), 주의 기도(마태 6:9-13, 누가 11:2-4),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태 20:1-16), 최후심판의 비유(마태 25:31-46) 등은 그 모티프를 전해 주는 중요한 전거들에 해당한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에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졌으며 그것은 축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부의 축적 자체를 거부하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나의 모티프는 주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다시 등장한다. 주의 기도의 첫 번째 기원 곧 하늘을 향한 기원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목에서 땅에서의 기원으로 전환한다. 하늘의 정의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원은 인간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조건들로부터 결핍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각기 다른 시간 동안 일을 한 노동자들에게 하루 생계비에 해당하는 동일한 임금을 부여한 포도원 주인의 원칙이 하느님 나라, 곧 하느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선포된다. 이 비유는 업적에 따른 분배정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노동의 기회 또는 노동의 시간과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최후심판의 비유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절실한 필요의 요구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절실한 필요의 요구에 직면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 또는 배제된 이들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성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정의를 이루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서의 관점은 업적의 논리를 일체 배격하는 바울의 인의론(認義論)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성서가 말하는 하느님의 정의, 동시에 땅에서 구현해야 할 인간의 정의는 그 어떤 업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일차적인 요건으로 한다. 성서의 전망을 따른 정의의 필수적인 요건은 업적에 무관하게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만큼 사회적 재화를 분배받는 것을 일차적으로 포함한다.

초기 교회와 교부들 또한 축적된 재물의 불의함을 경고하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나눔을 강조하였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4세기의 교부 요안네스 크리소스토무스(Ioannes Chrysostomus)는 부와 가난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부의 근원은

어떤 불의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죄악이라고 하였다. 크리스토폴로무스는 재물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배타적 축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토지와 자연 만물에 대한 공유를 역설하였을 뿐 아니라 부자들의 재산상속마저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축적된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사회적 정의의 요구를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하느님보다 재물에 의지하려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중세기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필요를 넘어선 욕구로서 탐욕의 죄악성을 주목하였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 욕구(wants)를 필요(needs)에 묶어두기를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입장에 공감하였다. 또한 아퀴나스는 소유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까닭에 종종 그 견해가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되기도 하지만, 아퀴나스의 소유권 개념은 사용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옹호하는 오늘날 자본주의적 소유권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아퀴나스는 재물에 대한 소유가 인간의 권한 밖에 있고 인간은 단지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소유란 일정한 인간사회의 질서 안에서 필요의 충족을 위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한 대부에 따른 이자를 취하는 것 또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사람을 죄에 빠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상과 같은 성서 및 그리스도교 전통에서의 가르침은 자본주의 이전의 필요 충족의 경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중세말기의 상업의 발달 등 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무력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적에 종속되는 경제적 질서, 다시 말해 인간이 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경제관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교의 경제관의 목표로서 남아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했다는 막스 베버의 명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베버는 종교개혁의 결과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정신이 형성되었다든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의 결과라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특정한 형태의 종교적 신앙과 직업윤리 사이에 어떤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을 뿐이다. 베버가 주목한 것은 여러 가지 신앙고백이 혼재하는 지방의 직업통계에서 자본주의적 직업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것이 현저하게 프로테스탄트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와 자본주의 정신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여기서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은 무제한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그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충동을 억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베버가 정의하는 자본주의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경영을 통한 이윤 추구, 즉 끊임없이 재생되는 이윤인 수익성의 추구하고 동일시된다.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 윤리가 그 정신적 기초가 됨으로써 양자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것이 베버의 통찰이었다.

베버는 먼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성서 번역에서 처음 등장한 Beruf(직업·소명)라는 독일어 단어에 종교적 표상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그 의미는 원전의 정신이 아니라 번역자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속적인 직업에서의 의무 이행을 최고의 도덕적 행위로서 존중하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 의미는 세속적 일상 노동이 종교적 의미를 가진다는 표상을 초래하였다. 다시 말해 수도원적 금욕을 통해 세속적 도덕을 능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 안에서 자신의 '직업'이 되는 세속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통해 신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루터는 가톨릭교회와 대결하는 가운데 수도원 생활을 세속적 의무를 회피하는 이기적인 냉혹함의 산물이라고 하는 한편 그와 대조적으로 세속적인 직업 노동은 이웃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루터는 세속적 의무 이행은 모든 상황에서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또한 허용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절대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직업생활에 도덕적 특성을 부여한 것은 종교개혁, 그 가운데서도 루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업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루터의 직업 개념이 베버가 말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정신과 친화성을 가졌는지는 의문시된다. 루터의 직업 개념이 세속적 노동에 대한 도덕적 강조와 종교적 보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정작 루터에게서는 전통주의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루터는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물질적 이익의 추구를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의 징표로 간주하고,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루터는 한편으로는 직업노동의 의미를 강조하였지만, 그것이 신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운명' 사상에 상응하는 전통주의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즉 각 개인은 근본적으로 신이 정해 준 직업과 신분에 머물러야 하며, 그의 지상에서의 노력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사회적 지위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결국 루터는 새로운 원칙에 입각해 직업노동과 종교적 원리를 결합시킬 수 없었다. 루터와 그 동시대인들의 입장은 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이전 자연경제로서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계층구조에 의해 제약되어 있었다.

루터가 강조했던 세속적 직업노동이 경제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그 경제활동에 어울리는 종교적 가르침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진전과 함께 칼뱅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였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출구를 열기는 하였지만 루터주의는 사회적으로 보수적이어서 기존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한 개인적 경건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었다면, 칼뱅주의는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운동으로서 개인의 정화(淨化)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재건, 그리고 공사(公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을 강화하여 사회를 쇄신하려는 경향을 띠었다. 루터주의가 배경으로 하였던 농촌사회와 달리 상업과 산업이 발전을 주도한 도시사회를 배경으로 한 칼뱅주의는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적 경제현상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으며 무역과 산업 종사자들을 향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설파하였다. 칼뱅주의의 가르침은 자본, 신용과 은행업, 대규모 상업과 금융, 그리고 기업세계의 여러 현실적 사실들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출발하였다. 장 칼뱅(Jean Calvin)과 그 추종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는 것을 비난하는 전통과 결별하였다. 그들은 중세의 사상가나 루터라면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을 법한 교역과 금융에서의 이윤을 노동자의 소득과 지주의 지대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칼뱅주의의 그와 같은 입장이 경제생활에 대한 윤리적 규율을 포기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칼뱅주의는 상업 및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조건 안에서 바로 그 조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의도하였다. 칼뱅주의는 경제적 동기가 작동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영적인 삶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자본가를 이웃의 불행을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으로 불신하지 않았으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제적 삶의 전반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칼뱅주의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방종과 과시를 위한 부의 남용이었다. 칼뱅주의의 가르침이 추구한 이상은 근면한 노동으로 자신의 성품을 단련하고, 신이 용납하는 직무에 전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균형 잡힌 진지함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회였다.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생활 자체를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목적을 지녔다. 그것은 교회에 복종하며 개별적 선행이나 종교적 의례를 통해 세속적 삶을 속죄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과거 세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전체를 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각자의 성품을 단련하고 더불어 사회를 재조직화하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교회와 국가 모두를 아우르는 현세적 삶 가운데서 윤리적 이상을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막스 베버는 칼뱅주의의 그와 같은 윤리적 이상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에 ‘예정론’ 교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예정론은 신의 전적인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결국 인간의 공로에 의해 그 결정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회적·성례전적 구원을 폐지하는 것을 뜻했고, 그것은 곧 일체의 주술적 구원 수단을 배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그 교리를 신봉하는 신자들은 교회든 사제든 그 어떤 수단에도 자신의 구원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전대미문의 내적 고독감’에 빠진 신자들은 나는 과연 선택되었는지,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하는 끊임없는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은총을 입은 상태의 인식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구원의 확실성’이 중대한 의미로 부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정론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선택된 자들’의 일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표지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칼뱅주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은 선택받은 자로서 금욕주의 윤리를 실천하고, 그 금욕주의 윤리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부단한 직업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확신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선택으로 간주하였다. 이 금욕주의적 생활양식은 신의 의지를 지향하고 그에 입각해 개인의 현존재를 합리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생활양식은 더 이상 세속 밖의 수도원이 아니라 세속과 그 질서 안에서 구현되었고, 세속의 삶을 합리적인 삶으로 변형시켰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이러한 세속적 금욕주의는 재산의 무절제한 향락에 맞서 싸우고 소비를 억압하는 한편 전통주의적인 경제윤리의 장애로부터 재화 획득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윤추구를 합법화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이 직접 원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주의적 경제윤리의 질곡을 분쇄해버렸다. 그로부터 나타난 외적 결과는 금욕적 절약 강박에 의한 자본형성이었다. 획득한 부의 소비적 사용이 제어되면서 그 부의 생산적 사용, 즉 투자자본으로서의 사용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의 그 통찰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프로테스탄티즘이 전통적인 경제관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확실히 경제에 대한 윤리적 가치 기준을 변화시킨 하나의 혁명이었다. 부의 남용 대신에 부의 선용을 권하는 윤리적 가치 기준은

확고했지만 부의 축적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음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충족시키는 필요 충족의 경제 개념은 이제 진부한 것이 되었다. 금욕주의 윤리가 필요 충족의 경제를 넘어 결과적으로 필요를 넘어선 욕구 충족의 경제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자본주의 형성 초기 국면에서 그 모순관계는 인지되지 않은 가운데 전통적인 경제관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관을 형성시켰다.

종교적 뿌리를 상실한 자본주의, 그리고 종교화한 오늘의 자본주의

베버는 자신이 관찰한 역사적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말미에서 종교적·윤리적 뿌리를 상실한 자본주의 현상을 언급함으로써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베버는 “금욕주의가 수도원의 골방에서 나와 직업 생활 영역으로 이행함으로써 세속적 도덕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또 공장제·기계제 생산의 기술적·경제적 전제 조건과 결부된 저 근대적 경제질서의 강력한 우주를 건설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우주’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강고한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인간의 운명 또한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다. “금욕주의가 세계를 변형하고 세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 세계의 외적 재화는 점증하는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자본주의는 기계적 토대 위에 존립하게 된 이래로 금욕주의 정신이라는 버팀목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정신이 하나의 명령처럼 인간의 삶을 곁돌게 되었을 때, 마침내 종교적·윤리적 의미를 박탈당한 영리추구 행위는 마치 스포츠의 특성처럼 순수한 경쟁적 열정과 결합한다고 베버는 지적하였다.

베버는 그 무시무시한 발전 과정의 끝자락에 새로운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될지 옛 사상과 이상이 다시 부활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일종의 발작적인 자기 중시로 치장된 기계화된 화석화가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음울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신없는 전문인, 가슴없는 향락인’에 지나지 않는 마지막 단계의 무가치한 인간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한 단계에 올랐다고 상상할 것이라며 탄식조로 말한다.

사실 막스 베버가 탄식한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분석은 그보다 앞서 칼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해 훨씬 근본적으로 이뤄졌다. 마르크스는 이전에 신성한 임무로 간주되었던 노동이 자본주의 체제하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그렇게 미화될 수 없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신비’를 벗겨낸다. 그저 자기 상실에 지나지 않는 ‘소외된 노동’의 비참한 실상에 대한 주목은 결국 자본주의적 상품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기본적으로 교환을 위한 방대한 상품의 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상품의 교환을 원활히 하는 수단으로서 화폐가 통용된다. 사실은 화폐 역시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까닭에 특별한 욕구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숭배의 대상이 된다. 그 화폐는 단순한 교환수단으로 유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되면서 자본으로 전화되어 끊임없이 순환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몸집을 불린다. 상품의 생산과 교환, 그리고 자본의 축적이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의 몫이다. 그런데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의 끊임없는 이윤추구로 노동의 착취가 강화되고, 노동자들이 비인간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마르크스가 『자본』 1권에서 분석한 요체이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상품관계에서 나타나는 물신성(物神性)에 대한 통찰이다. 그것은 상품과 화폐, 그리고 자본이 독자적인 힘을 가진 실체로 오인되고 심지어 절대적 숭배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것은 사적 소유권에 바탕한 노동분업의 맥락에서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적 소유권이 전제된 조건에서 교환을 전제로 하는 상품의 생산은 사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이윤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쏟아져 나온 상품들은 이제 저마다 서로 가치를 건주는 가운데 교환되고 유통된다. 여기에서 상품은 마치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고 급기야는 숭배되기에 이른다. 그 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화폐,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유통되는 자본의 물신화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 완성된다.

그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부는 종교개혁을 통해 제한된 조건 안에서 허용되었던 것인데, 종교적 뿌리를 거두어치우면서 이내 부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마침내 종교 자체로 승격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야말로 ‘자본-교’ 아래서 하나가 된 현실을 살고 있다(Paul Lafargue, La religion du capital). 여기서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기존 종교는 사실상 새로운 종교에 영합하거나 기생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신앙에 입각해 윤리적으로 경제를 규율하고자 했던 전통은 사라지고 오히려 경제 현상에 편승해 종교가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자본주의 현실에서 그리스도교 경제윤리의 과제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교 윤리는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여기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교의 경제에 관한 가르침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관, 즉 인간이 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경제관에 바탕한 접근 방법이며, 또 하나는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변화하는 경제 현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윤리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접근 방법이다. 전자가 인간의 물질적 삶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오랜 지혜의 전통이 일깨워준 윤리적 이상을 함축한다면 후자는 그 윤리적 이상이 구현되어야 할 변화무쌍한 현실의 조건에 대한 통찰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경제 현실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적 진단과 대안의 모색에서 그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윤리적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의 조건에 대한 이해 또한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부의 축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그림으로써 그 자체로 종교와 같이 승격된 현실에서 그리스도교 윤리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제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오늘의 그리스도교 윤리는, 필요 이상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가 인간의 삶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생활을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 위치를 재조정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제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였던 과거의 지혜를 다시 생각하는 과제를 포함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생활에서의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두 번째로 오늘의 자본주의 현실에 대처하는 그리스도교 윤리는 이미 종교화된 자본의 형이상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그 허구성을 드러내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위한 방편으로서 경제체제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이미 목적이 됨으로써 종교화되었다. 자본주의가 종교화되었다는 것은 그 나름의 형이상학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오늘의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자연적 질서일 뿐 아니라 곧 신의 섭리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말한 경제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제질서를 자연적 질서이자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형이상학의 철폐를 동반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물신숭배에 관한 분석 이래 신학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지금 말한 두 가지 차원의 과제 모색은 이미 자본주의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노정된 시점에서부터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가톨릭교회의 일련의 사회적 회칙들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는 교황의 발언을 통해서도, 또한 개신교의 에큐메니칼 논의의 지평에서도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이 늘 중심적 주제가 되어 왔다. 이 발제는 그러한 시도들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하고, 그 시도들이 함축하는 의미가 오늘의 교회 안에서 실천적 윤리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경제를 넘어선 신학적·실천적 상상력

이상에서 확인한 그리스도교 경제윤리의 접근 방법을 전제할 때, 오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그리스도교의 경제윤리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유념한다면, 그 대안은 필요 충족의 경제를 지향하되 그것이 오늘의 기술적·물질적 발전의 조건 가운데서 구체화하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선 정상적 회복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회귀가 아니듯, 오늘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선 대안이 자본주의 이전의 농경사회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일 수 없다. 그 대안은 이미 성취한 기술적·물질적 조건의 기반 위에서 자연과 사람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는 경제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착취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뜻하며, 그와 동시에 기존의 관계에 매여 있는 인간의 욕망을 재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앞선 논의에서 검토되고 제안된 여러 사회정책들과 제도적 방안들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연과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경제, 무한한 욕구를 자극하지 않고 적절한 필요를 만족시키는 경제를 위한 관계의 재구성은 역시 정치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준다. 지구적·지역적·국가적 살림살이를 위해 절실하게 요청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제도화하는 정치의 중요성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한편의 무능한 정치(미국과 유럽 등)와 또 다른 한편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중국)를 넘어서는 대안이 요청되고 있는 점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말하는 바와 같이(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2020) 그 대안을 일종의 ‘전시 공산주의’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진정한 효율성을 함축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 비상한 대안의 절박함은 비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것만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가 노정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비로소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빚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드러난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 계기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볼 때,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위기의 진단과 대안의 모색은 여전히 귀담아 들어야 할 가치를 지닌다. 예컨대 “과연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지?”를 묻는 근본적 물음(Robert Skidelsky·Edward Skidelsky, How Much Is Enough?: The Economics of the Good Life, 2012)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성취한 기술적·물질적 조건 위에서 인류를 해방하고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대안을 꿈꾸는 상상력(Aaron Bastani, 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 2019)에 이르기까지 그 지혜를 모으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앞서 이야기한 바이지만,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인간의 살림살이에 관한 오랜 지혜들을 갖고 있다. 욕망의 절제와 이타적인 나눔의 삶을 그 요체로 하는 지혜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전반에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체제와 그 삶의 방식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이지만, 그것은 확실히 새로운 대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명의 전환 기회일 수 있다. 비로소 전 지구적 ‘인류애’를 실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웃의 문제가 곧바로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절감하고 있다. 그것은 물질적 이해관계로 얽힌 차원에서 나아가 생명 그 자체가 서로 얽혀있다는 자각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오늘 겪고 있는 위기가 특정한 인간문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진단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판의 근거만이 아니라 동시에 희망의 근거일 수도 있다. 그 위기는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에 동시에 극복의 실마리 또한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어떤 시대이든 특정한 경제적 삶의 방식은 그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사회적 질서의 일부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 역시 인간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성취된 기술적·물질적 조건 위에서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이 자연과 다른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 경제적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물론 인간의 선택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천진난만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 밖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더욱 겸허히 되새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을 깊이 새기면서도 선택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간다면 최소한 오늘 자본주의의 폐해를 넘어서는 경제질서에 다가설 수는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또한 열릴 것이다.*

논찬

코로나 19와 대안적 경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허 석 현
(한국민중신학회)

코로나 19로 인해 가중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상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두 분의 발제는 오늘 한국 사회 현실의 문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풍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승윤 교수는 진화되어 가는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방식이 “노동의 불안정성”을 초래해왔으며, 오늘날 “액화노동”이라는 노동 착취구조로 변화된 현실을 문제 삼는다. 불안정한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표준적 노동 현실을 보완하지 못하는 현행 노동법과 복지제도는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종속성은 심화되어 가고 노동의 주권과 자율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주권의 박탈은 사용자에 의한 공유부의 독점으로 인해 가속화된다. 발표자가 지적하는 경제 정의의 문제는 이 점에 있다. 노동 불안정성, 노동 주권의 침해, 공유재의 독점 현상은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들로 지적된다. 그러면 발표자의 대안적 주장은 무엇인가?

우선 발표자는 현재까지 처방되어 왔던 문제 해결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즉, 현행 사회보장 시스템은 “임금노동중심 분배 시스템의 미시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임금노동중심의 근대적 사회보장 정책은 플랫폼 노동자처럼 액화 노동의 형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유부의 정의로운 재분배를 주장한다. 소득보험, 직업교육, 기본소득은 구체적인 대안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대안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사회 정의(물질적 사회적 수단에 대한 평등한 권리), 정치 정의(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 정의(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그것이다. 세 가지 원칙위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종속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표문에서 주목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과 문제의식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큰 세 가지 원칙(사회, 정치, 환경)은 현재 노동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즉,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사회/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 동반되어야 하며, 개발과 소비 중심의 근대적 발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정의까지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통찰이다. 그러나 사회(경제) 정의, 정치 정의, 환경 정의의 상호관련성과 각 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물론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노동 주권의 확보는 금전적 수혜를 확대하는 수동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실질화하는 적극적 정치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욕구에 기반한 과잉 생산과 소비 촉진이 아닌, 소외된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가 공평하게 배분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의는 결국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정의로 수렴된다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읽힌다. 말하자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정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들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세 영역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들 관계들은 자세하게 보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발표자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간의 부정합 문제의 해결이 임금노동중심 분배시스템의 미시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 방안으로 소득보험과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발표자는 소득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 제도의 과도적 단계를 거쳐 완전기본소득의 실현으로 노동의 탈상품화, 노동 주권, 노동 자율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발표자처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완전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보완적 과정 단계로 보는 것이 옳은지, 완전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종착지인지는 판단할 문제이다.

진보진영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고 새로운 대안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진보진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보수진영에서 기본소득은 교착상태에 빠진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한 순환구조를 안정화시킬 대안으로 다뤄진다. 사용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자 임금을 국가재정으로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부담을 회피할 명분이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복잡한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시키고 행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 신자유주의 체제의 존속을 옹호하는 보수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는 기본소득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발표자가 주장하듯,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의 과도적 완충적 장치로 보고, 완전기본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완성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의 이질성 성격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동과 소득의 연속성을 전제로 노동의 교환가치를 상품가치로 물신화한 것에 대한 저항하여 노동의 탈상품화를 지향한다. 여기서 탈상품화라는 개념에는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불연속성(분리)을 전제로 인간 사회의 보편적 복지체계를 실현하려는 분배체계로서 모든 개인에 대한 공유부의 동등한 배당을 통해 탈노동화를 지향한다. 탈노동화 개념에는 노동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탈상품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탈노동화를 위한 기본소득과 다른 영역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사회보장 장치의 끝에 있는 최종목표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셋째, 이러한 판단에 동의할 수 있다면, 탈노동화로서 기본소득이 노동 주권과 자율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해명되어 한다.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완전한 분리 위에서 이뤄진다. 노동이 배제된 소득은 자본에 저항하는 주체의 성격까지도 변화시킨다. 지금까지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대립은 고용관계라는 조건 안에서만 성립 가능했다. 노동계급이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 부대로 인정되어온 것은 고용중심의 시장 경제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을 기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중심의 운동은 액체 노동화 시대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탈노동화를 추구하는 기본소득의 새로운 경제구조는 자본에 저항하는 주체를 임금 노동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조합적 주체 조직형태가 불가능한 액화노동 시대에 정치적 주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항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근대화 시대에 노동 주권이 노동의 상품화를 강요받은 노동자에게 있었다면, 탈근대화 시대에 노동 주권의 실체는 불특정 다수의 디지털 공공재의 상품화를 강요받고 있는 시민일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직된 주체가 반드시 노동조합 형식일 필요는 없다. 계급으로 분화되지 않고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무너진 사회에서 누구나 노동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거점으로 삼고 이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모든 힘을 주체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 요구이다. 그러한 노동 주권의 주체는 포괄적이고 비규정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주권은 곧 시민주권이며, 지역 네트워크 연결망에 포함된 주민들의 자치영역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액화 노동 시대에 사회복지 활성화와 증대를 위한 주체의 무게중심을 노동계급 일변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계급을 포함하는 시민 일반의 복지 연대체는 노동 시민을 복지를 위한 납세자 뿐 아니라, 복지의 제공자, 복지의 입법자, 복지의 담론조직자로서의 역할로 확장된다. 지역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주민 자치 운동은 수동적인 납세자의 지위에서, 국가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복지의 예비적 시행자, 제공자로 될 수 있으며, 입법화를 위한 대중적인 실험의 장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복지국가로 이행의 주체가 정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 자치 조직의 형태로 시작된다면 노동주권의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주권과 자율성이 시급한 현안인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기본소득은 노동주권의 사안이라기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개별화된 시민을 정치적, 경제적 주체로 세우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넷째, 액체 노동화 시대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은 국가의 적극적인 통제와 개입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 개입의 강화는 노동주권과 자율성과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개입 정도와 노동 주권은 반비례 한다. 국가의 개입 증대가 노동 주권의 확대로 이어질지, 국가 권력의 통치를 효율화하는 장치와 기술로 정당화 될지는 국가의 권력의 성격과 권력의 수행 주체가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발표자가 지적한 정치 정의의 문제의 중요성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유와 참여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정의(기본소득)는 자본주의 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국가 통치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통치적 기능의 강화에 대한 우려는 하버마스, 베버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호르크하이머, 루카치, 아도르노를 비롯하여 알튀세르, 푸코, 바디우까지 탈근대주의에서 줄곧 강조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면 실질적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정의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발표자는 “실질적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배당권의 보장을 통해 실현”된다고 짚막히 말한다. 여기서 민주주의 배당권의 정확한 의미는 밝히지 않았으나, 민주주의를 공유재로 이해한다면 참여의 권리는 시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원론적인 주장에 머문다. 대안적 논의로 나가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부터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이에 편재하는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선택과 지향 목표를 위해 기본수당 논의를 출발점으로 아래로부터 담론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최형묵 박사의 발표문(「욕구충족의 경제를 넘어 필요충족의 경제로」)은 앞선 발표에서 깊이 다뤄지지 않은 대안적 경제의 거시적 방향성에 대한 제안의 성격을 가진다. 발표자는 필요충족의 경제가 욕구충족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신교 금융주의의 기여와 역할을 베버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발표자가 베버의 이론을 끌어온 이유는 욕구충족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진화과정에 연루된 개신교 윤리관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교 윤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면 발표자가 제안하는 ‘필요충족’의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경제생활에서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선 이 교수의 사회, 정치, 환경 정의에 관한 주장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종교화된 자본의 형이상학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기술적 물질적 발전의 조건”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안은 이미 성취된 물질 조건 위에서 “자연과 사람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는 경제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착취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표자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교수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정치의 형태는 무엇인가? 발표자는 지젝의 “전시 공산주의”를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진정한 효율성을 함축”하는 대안적 정치 형태로 언급한다. 어떻게 ‘전시 공산주의’는 욕구충족의 경제를 필요충족의 정의로운 경제로 전환시킬 방안으로 될 수 있을까? 우선, ‘전시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지젝은 볼셰비키 혁명이 반혁명세력에 의해 고립되었을 때 전시 상황 속에서 전개된 강력한 공산주의 통제 시스템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국가의 강력한 개입의 정치 방식으로 본다. 강력한 국가 통제 권력을 전제로 하는 정치 방식을 상상하는 까닭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대한 신뢰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젝이 말하는 전시 공산주의란 국가의 계획과 조정에 의한 새로운 연대와 협력 체제를 의미한다. 발표자가 ‘전시 공산주의’를 필요충족을 위한 정의로운 경제 질서의 대안으로 보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국가 개입의 확대를 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 통치 형태가 시민의 정치적 주권과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하는지는 사회의 자연적 진화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이뤄진 사회적 질서”의 문제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시 공산주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많다. 국가의 적극적인 통제가 곧 (공산주의적) 연대와 협력의 대안 경제 질서로 이행되리라는 기대는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정확한 생각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향한 대안 경제 질서는 사회적/경제적 복지 정책의 무조건적인 확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물질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제 주체들의 정치적 합의와 선택으로 욕망충족의 경제를 재배열하고 필요충족의 경제로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 권력의 성격과 방향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다.

끝으로, 민중신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두 분의 발표문은 소외된 민중의 권리 실현을 지향하는 민중신학이 미처 깊이 관심가지 못했던 국가 사회 복지 정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익하였다. 고통 받는 민중 현실에 대한 연대를 넘어서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민중신학에도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앞으로 이 영역은 민중신학에 연구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두 분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발표문으로 논의의 풍부함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논찬자의 지식 부족으로 발표자의 의도와 다른 오독이 있었다면 너른 양해를 구한다.

논찬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의
발제문을 읽고...

강 신 환
(이화여대)

2021년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초국가적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류의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가치관과 시스템이 중단되고, 단절되고, 붕괴되는 ‘대혼란’(the Great Disruption)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런 위기상황에서 사회 발전의 이상적 모델로 여겨졌던 서구 선진국들이 보여준 무능력과 극단적 이기주의는 팬데믹 이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가치관과 체제를 필요로 함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사회 불평등 등 이제껏 누적되어 왔던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의 위기 상황을 완화 또는 종식시켜줄 수도 있는 백신의 확보와 배포에서조차 부에 따른 불평등의 양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이번 팬데믹 상황은 코로나19 발병의 최초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대량생산체제의 경제 수량적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여겨 국가의 보호와 규제 기능을 제거하고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생산과 무역을 통합시켰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염의 공포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일하라는 요구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가능할 뿐 공장, 병원, 대중교통, 택배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노동 강도에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수고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체 차별과 회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엄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육체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성과 노동의 불안정성에 더불어 혐오의 대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종식되지 않아 앞으로 또 어떤 충격이 인류에게 전해질지 모르는 현재의 상황에서 선불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두 개의 제안은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구상하는데 필요한 논의임이 분명하다.

■ 욕구충족의 경제를 넘어 필요충족의 경제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경제를 넘어선 신학적 상상력

발표자 최형묵 선생님이 지적하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위기는 그동안 추구되어 왔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발표자는 성서의 본래적 경제관은 하느님의 '정의'의 개념에 정초한 '필요 충족이 경제'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곧 경제활동의 목적임을 성서의 여러 예시들을 통해 보여준다. 즉,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결핍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며,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업적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서적 관점에 기초하여 이후 초기 교회와 교부들, 그리고 중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부의 축적은 하느님보다는 재물에 의지하려는 불신앙의 표상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욕구(wants)를 필요(needs)에 종속시킨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공감한 스콜라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재물의 소유는 필요의 충족을 위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며 인간은 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을 가질 뿐이며,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하느님의 소유를 남용하는 행위가 되는 반면, 그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성서의 약자보호 정신에 기초해있다.

성서 및 서양 중세에 이르는 기독교 전통에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채 행해지는 부의 축적을 경계하는 가르침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자본주의 탄생 이전의 경제관을 '필요충족의 경제'로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양사회에서 이러한 필요충족의 경제가 부의 축적을 허용하는 자본주의로 이행한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 막스 베버는 보았다. 베버는 자본주의 출현의 근본원인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있다고 단순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을 억제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과 세속 직업에서의 의무 이행을 최고의 도덕적 행위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 둘의 결합이 절제하고 근면한 부르주아 계급을 형성하고 세속적 노동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근대 노동계급의 탄생을 가져왔다고 베버는 본 것이다.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경제활동을 필요의 충족에 국한시켰던 기존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전환이 분명하다.

베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 의도와 분석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프로테스탄티즘과 당시 발흥하는 자본가 계급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특히 칼뱅은 모든 직업을 하느님의 소명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성실하게 일하되 게으름과 태만을 배격하고 근검절약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한 부의 축적이 자본주의의 태동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베버는 일단 이렇게 형성된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점차 종교적, 윤리적 성격을 배제하게 되면서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즉, 금욕적인 직업윤리가 사라지고 자기 본위의 이기적 직업관이 확산되면서 본래 종교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던 자본주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리추구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된 것이다.

종교적·윤리적 뿌리를 상실한 자본주의의 확산이 가지는 위험성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표면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현실에서 그 기독교 윤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표자는 두 가지 접근 방법과 그에 동반하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데 현실의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목도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들로, 큰 틀에서 말하자면 이 발표의 주제처럼 ‘욕구충족의 경제’에서 ‘필요충족의 경제’로의 전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정치의 중요성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경제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제시되었지만 발표자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발표자가 주목한 지적의 ‘전시 공산주의’가 그 명명이 도발적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을 현존하는 세계질서 내에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모든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정치권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필요충족의 경제’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생존의 보장이 긴급하게 요구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욕구’와 ‘필요’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대비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속적인 의문이 든다. 발표자도 그 둘의 구분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간 본성론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수세기동안 욕구충족적 자본주의 경제를 경험한 인류에게 이제 그 구분이 과연 가능한지, 그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현대의 인간 연구는 생물학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생산과 이윤추구만을 강요하므로 인간 내면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오직 자본을 향한 것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는 욕구충족적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는 욕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로의 욕구의 편중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에 대한 신자들의 갈망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들이 결핍하고 있는 완전성에 대한 욕구의 표출이 아닐까? 그렇다면 문제는 인간이 가지는 욕구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욕구를 물질적 축복의 갈망으로 환원시켜버린 많은 한국교회의 가르침에 있는 것 아닐까? 인간의 본래적 요구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코로나19이후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필요충족의 경제’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필요조건 속에 생산과 소비에만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질문해 본다.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이승윤 선생님의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을 통해 비대면이 미덕을 넘어 의무가 되어 버린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들려오는 택배노동자들의 비보와 그들의 노동 현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비극에 내몰리는데 일조한 제도적 허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세계화,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향상돼 생산에 필요한 노동인구의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노동의 자리라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현 상황은 노동의 의미와 형태 변화, 그리고 노동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을 점점 잃게 되는 액화노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발표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문제의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특정한 노동형태와 노동시장을 전제로 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노동의 액화에 부적절하다고 진단한다. 즉,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조직노동, 전일제 노동, 장기근속 노동 등을 전제하는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분배나 최저임금인상 등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중심 분배 시 F6A328스텝의 개선은 액화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표자는 복지국가 수립의 역사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자본에의 종속적, 타율성으로부터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로 파악하고, 이러한 역사적 관찰에 기초하여 액화노동 현실에 적합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정의 실현, 실질적 자유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주는 정치정의의 실현,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정의 원칙이 그것들이다. 사회복지제도를 자본에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보는 발표자의 시각은 자본가 입장에서 생산에 투입될 수 양질의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가 대신 담당해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신성함 훼손, 도덕적 해이 등 구태의연한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기피해 온 근본적 이유를 직시하게 해준다.

노동의 상품화와 종속화라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액화되어가는 노동의 위기에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 전문가의 분석과 제안을 평가하거나 첨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지만 논찬의 임무를 맡은 이상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발표자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구상에서 완전기본소득의 실현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의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구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적 수단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에 대처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원은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 하에서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었지만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행이도 이 제도의 구상과 실행 단계에서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재난지원금의 실행 효과를 분석 평가하는 기관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자신들의 이념 성향, 그리고 실제로는 자본에의 종속성 때문에 각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이미 기존의 복지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이를 실행할 경우 재정적 부담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들이 대체되어 오히려 현재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향후 일정

| 장소와 시간

- 1) 장소: 평창동 대화의 집 (시즌1) & 기독교회관 조예홀 (시즌2, 특별프로그램)
- 2) 시간: 오후 6시 시작
- 3)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7차 - 4월 12일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내용

1) 시즌 1

1차 - 9월 14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에 걸맞는 삶과 신앙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도모하는 총론적 성격의 1차 토론회이다. 앞으로 다루게 될 토론주제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그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 전망한다.

- 인사말: 채수일(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이홍정(NCCK 총무)
- 발제: 김준형(국립외교원, 정치학) 양권석(성공회대, 신학)
- 논찬: 홍인식(한국기독교연구소) 송진순(이화여대) 이상철(크리스찬아카데미)
- 정리와 총평: 박창현(감신대)

2차 - 10월 12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 이후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 변화의 문제가 급변 사태와 긴밀하게 연동된 문제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위기로 몰리는 생명현상과 자연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2차 토론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생명과학자를 초

대해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명일반의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다방면의 신학적 진단과 성찰의 시간을 마련한다.

- 발제: 유지환(연세대, 의생명과학)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신학)
- 논찬: 백소영(강남대) 이진형(기환연) 김정원(향린교회)
- 정리와 총평: 이은경(감신대)

3차 - 11월 9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와 한국사회 현상학”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K-방역의 선진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사회시스템과 그를 지탱하고 있는 전통과 배경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이 많이 등장했다. 한편 신천지와 일부 개신교의 파행적 행보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이렇듯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민낯과 대면할 수 있었고, 이는 종교사회학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요청한다. 3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한국사회 현상학”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 사회현상을 폭넓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발제: 김선욱(숭실대, 철학) 이숙진(이화여대, 신학)
- 논찬: 황용연(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혜령(이화여대) 나성권(성공회 교육국)
- 정리와 총평: 김희현(향린교회)

4차 - 12월 14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 K-방역으로 부각된 한국사회의 공동체주의와 그와 대척점에 서있는 개인주의 사이 발생하는 갈등과 조화의 문제를 다룬다. 코로나19는 방역을 위한 국가주의의 등장에 대해 옹호와 견제하는 그룹사이 이견을 노출시켰다. 이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사이 발생했던 사회철학의 오랜 난제이기도 하다. 교회 역사의 발전과정에서도 공동체내 의사소통과 결정의 문제는 중요한 교회사의 사건이었고 교회론의 주제였다. 코로나19는 교회와 사회에서 예외상태가 등장했을 때 공동체의 운영과 화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였다. 4차 토론회는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룬다.

- 발제: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사회철학) 정미현(연세대, 신학)
- 논찬: 오현선(전 호남신대) 최순양(협성대) 한수현(감신대)
- 정리와 총평: 박도웅(감신대)

2) 특별 프로그램 - “코로나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발표

■ 일시와 장소: 1월 11일(월) 오후 6시
/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

☞ 기사연 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정치(이상철), 생태·경제(신익상), 한반도 및 국제관계(김상덕), 젠더 및 사회 취약계층(송진순), 교회 및 신앙관(이민형) 등 6가지 분야에 걸쳐 1000명의 개신교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이후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2020년 말에 보고서 형식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시즌 1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발표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시즌 2

5차 - 2월 8일(월) 오후 6시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

: 코로나19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언택트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다. 종교분야에서도 언택트 양상은 두드러진 특색으로 자리잡아 기존의 신앙생활과 패턴에 많은 변화의 조짐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전개되고 있는 언택트 상황 속에서 종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새롭게 조성된 상황은 우리의 기존 신앙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신앙패턴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5차 토론회는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발제: 조한혜정(연세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정경일(새길기독사회문화원, 신학)
- 논찬: 김상덕(기사연)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 박홍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 정리와 총평: 이민형(기사연)

6차 - 3월 8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생태적 순환경제로의 전환”

: 코로나19 위기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요청하고 있다. 공급, 수요, 소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전면적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질서는 과연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가운데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움아매운 경제체제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6차, 7차 토론회는 새롭게 구성해나가야 할 대안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 발제: 홍기빈(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경제학) 강원돈(한신대 은퇴교수, 신학)
- 논찬: 홍인식(한국기독교연구소) 김유준(연세대) 신익상(성공회대)
- 정리와 총평:

7차 - 4월 12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 코로나19 위기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요청하고 있다. 공급, 수요, 소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전면적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질서는 과연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가운데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옳아매운 경제체제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6차, 7차 토론회는 새롭게 구성해나가야 할 대안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 발제: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 최형묵(민중신학회, 신학)
- 논찬: 허석현(민중신학회) 강신환(이화여대) 유승태(꽃피는신뢰)
- 정리와 총평: 양만호(노원 나눔의집)

8차 - 5월 10일(월) 오후 6시 “마무리 대토론”